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7호 (2023.1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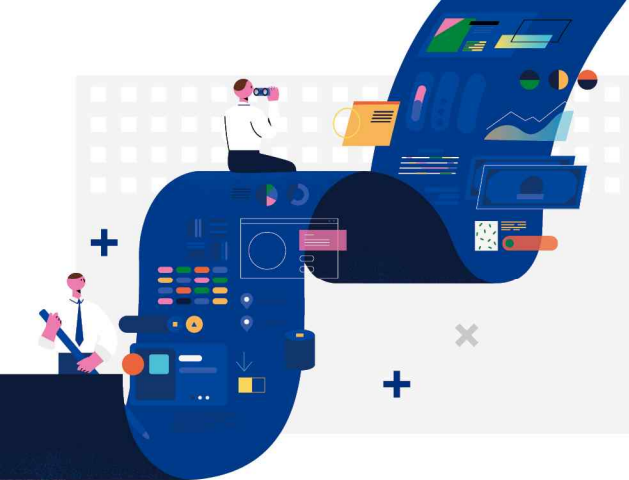
■ 이 슈

(산업)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실태 및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7호 (2023.12.08)

Cotents

I. 이 슈

(산업)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실태 및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건설) 건설 및 주택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금융) 무주택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11

(산업) 정부,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통해 혁신적 R&D 도전 촉진 11

(산업) 2050 해양강국 실현을 위한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 수립 12

(복지) 정부,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가 확대 12

(산업) 국토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추가 지정 및 운영 성과 발표 13

(경제)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 4일부터 한 달간 진행 13

(금융) 금융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및 제도 개선 추진 14

(보건) 12월 15일부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및 안전성 강화 추진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산업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 준비 실태 및 시사점



#자동차산업 #산업전환 #미래자동차 #기술트렌드 #준비실태 #정책지원방향

- 최근 글로벌 자동차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환경규제와 더불어 인공지능 및 빅데이터 등의 발전된 신기술을 적용함에 따라 C.A.S.E¹⁾로 대표되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래차 시대로의 전환이 가시화
- 미래차란 친환경 전기차 및 수소차, 정보통신 기술(ICT)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자율주행차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자동차산업과 관련하여 배터리 전기차(Battery Electric Vehicle, BEV), 수소전기차(Fuel Cell Electric Vehicle, FCEV), 하이브리드 전기차(Hybrid Electric Vehicle, HEV), 연결성 및 디지털화 등이 중요한 이슈로 대두(KPMG, 2020)
 - 자동차산업의 전동화 이슈와 전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 기조에 따라 각국 정부는 공격적인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전기차의 경우 판매 및 등록 대수가 매년 급성장을 진행 중
 -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에 따르면 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lug-in Hybrid Electric Vehicle, PHEV)를 포함하는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은 2022년 기준 1,000만 대 이상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전체 신차 판매 대비 전기차 비중은 2021년 9%에서 2022년 14%까지 증가
 - 우리나라의 경우 2022년 말 기준 전기·수소·하이브리드차를 포함한 친환경차의 국내 등록이 전년대비 37.2%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친환경차 수출 대수는 전년대비 36.8% 증가한 약 55.4만 대로 전체 자동차 수출 대수의 약 24.0%를 차지

[표 1] 주요국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 정책

국가	정책 주요 내용
미국	• EV, PHEV 구매 시 연방세 최대 7,500달러 환급, 주정부별 소득세, 등록세 감면 등 시행 • 2022년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The Inflation Reduction Act) 시행
영국	• 'Plug in Car Grant' 제도를 통해 저배출 차량구매자를 대상으로 구매비용의 일정 비율을 보조
프랑스	• BEV 구매 시 보조금 6,000유로 지급 및 차량 소유세 할인(지역별 차이) • 노후차량 폐차 후 신규 PHEV 및 BEV 구매 시 전환보조금 각 1,000유로 2,500유로 추가 지급
독일	• CO2 배출 20g/km 이하의 저배출 차량에 대해 연방 및 제조사에서 반반씩 출자해 보조금 지급
일본	• 청정에너지 자동차 구입비용의 일부 보조 • EV는 1회 충전 주행거리 km 당 1,000엔을, PHEV는 주행거리 30km 이상에 한해 일률 보조금
중국	• EV, PHEV 등 신에너지자동차와 HEV 등 에너지절약자동차를 구분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
한국	• 전기자동차 사양 및 성능에 따라 기본보조금, 가격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등을 합산 지급 • 전기차 이외의 HEV, PHEV, FCEV 등에 대해서도 보조금, 세제 혜택, 충전요금 할인 등을 제공

* 자료 : 각국 정부 홈페이지 참고 및 재구성

1) C.A.S.E란 자동차산업의 기술혁신 트렌드를 뜻하는 용어로, 연결성(Connected), 자율주행(Autonomous), 공유서비스(Sharing), Electrification(전동화)를 의미하는 줄임말.

- 국내에서 자동차산업은 국가기간산업이자 5대 수출산업 중 하나로 국가 및 국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자동차산업 내 새로운 패러다임인 미래차의 경우 최근 산업의 성장 가능성 및 중요도를 고려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²⁾으로의 지정을 검토 중
 - 자동차산업 내에서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점차 가시화됨에 따라 2019년 이후 국내에서도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적 대응을 적극적으로 추진
 - 2019년 10월 정부는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을 발표하며 △친환경차 △자율주행차 △커넥티드 서비스 등 미래차의 제조·보급 및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 자동차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 가속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
 - 이후 2020년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21년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등을 발표하며, 자동차 전·후방 연계 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글로벌 미래차 시장 경쟁력 확대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정책을 시행
 - 2023년 5월에는 자동차산업(완성차, 부품)의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발표³⁾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23~’27)」를 통해 미래차 분야의 국가첨단전략산업 지정을 검토하는 등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

[표 2] 전국 및 인천 자동차산업 비중

(단위 : 명, 백만 원)

구분	전국		인천	
	종사자수	매출액	종사자수	매출액
제조업(A)	4,260,429	1,816,488,828	253,606	82,184,926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B)	361,407	205,678,665	19,332	9,866,730
비율(B/A)	8.5%	11.3%	7.6%	12.0%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총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동 자료는 경제총조사의 등록기반 지역편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

- 미래차 산업은 인천시의 지역 경제와 고용에도 중요한 산업으로 지난 10월 지역의 6대 집중전략산업으로 지정되었으며, 인천시 차원의 다양한 육성 지원책도 발표
 -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의 자동차산업은 지역 내 제조업 총종사자 수의 7.6%, 총매출액의 12.0%를 차지하는 중요산업으로, 전·후방산업까지 고려할 경우 자동차산업의 파급력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
 - 이에 인천시는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중심 산업구조 전환⁴⁾에 대비하기 위하여 2022년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22~’26)」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새로운 산업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 추진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에 따른 '국가첨단전략산업'은 공급망 안정화 등 국가·경제 안보에 미치는 영향 및 수출·고용 등 국민경제적 효과가 크고 연관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현저하여 법령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연구·개발 또는 사업화하거나 이에 필요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산업을 의미. 2023년 5월 기준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4개 산업 분야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

3) △자금지원(14.3조 원) 및 일감 확보('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 규모 5배 확대)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 △미국, EU 등 2대 주력 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 등 3대 시장 자동차부품 수출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

4)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표 3] 참조.

- 동 계획은 5대 추진전략⁵⁾, 25개 중점과제 추진을 통해 2030년까지 지역 내 자동차산업의 기업 수 885개 사, 매출액 17조 5천억 원, 고용인원 30,512명의 중장기 목표를 달성하고, 인천 자동차산업을 미래차 중심으로 재편해 기술고도화를 이루는 것을 목표
- 또한 2023년 5월 인천시는 미래차를 포함한 6대 집중육성 전략산업⁶⁾을 선정하고, 전략산업의 육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안)」을 수립·발표

[표 3] 미래차 전환에 따른 패러다임 전환과 변화

구 분	사회적 요구	패러다임 전환	예상 변화
전기동력화	탄소배출 규제, 자원 절감, 유지비 절감	동력원 변화 (엔진·미션 → 배터리·모터)	• 동력전달계 구조 변화 • 배터리 원가 비중 증가
자율주행	안전 규제 및 인식 강화	운전주체 변화 (사람 → 시스템)	• ICT기술 중요성 증가 • 차량 활용 방식 변화 (이동수단으로서의 개념 탈피)
차량공유	도심화, 1인 가구 증가, 공유경제 발달	인식 변화 (소유 → 공유)	• 신차 수요 위축 • 차량공유 플랫폼 제후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1) 참고 및 재구성

-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미래차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자동차부품의 개발과 생산, 기술인력, 요구 기술 등 자동차산업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되고, 정부에서도 산업전환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대응은 아직까지 충분하지 않은 상황
- 최근의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전환은 △자율주행화 △친환경·전기동력화 △모빌리티 서비스화 등 자동차 산업구조의 다양한 분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 정부의 자동차 부품기업 실태조사 결과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수 및 고용의 약 47%에 해당하는 4,195개 사가 자동차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사업재편 필요 분야에 해당⁷⁾
 - 감소 예상 분야 해당 기업 중 엔진·배기·연료계 등의 부품을 제조하는 2,815개 기업이 전기차 전환 시의 고위험군에 속하며, 2030년 기준 전기차 비중 33%를 가정할 시 약 900개 기업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
 - 반면 전장부품, 배터리 등 미래차 관련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210개 사로 전체의 약 2.3% 수준이며,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액은 매출액의 약 0.98%에 불과하여 기업들의 산업전환을 위한 투자와 지원이 요구
- 한국자동차연구원(2022.03)에 따르면 전국 자동차 부품기업의 약 72.6%(7,416개)가 '미래차 대비에 대한 현재 계획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나, 동 기업 중 약 60.7%는 향후 미래차 사업 진출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5) △커넥티드카 산업 특화육성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선도 △부품기업 미래차 기술전환 촉진 △미래차 부품기업 혁신성장 지원 △미래차 산업 육성 지원체계 구축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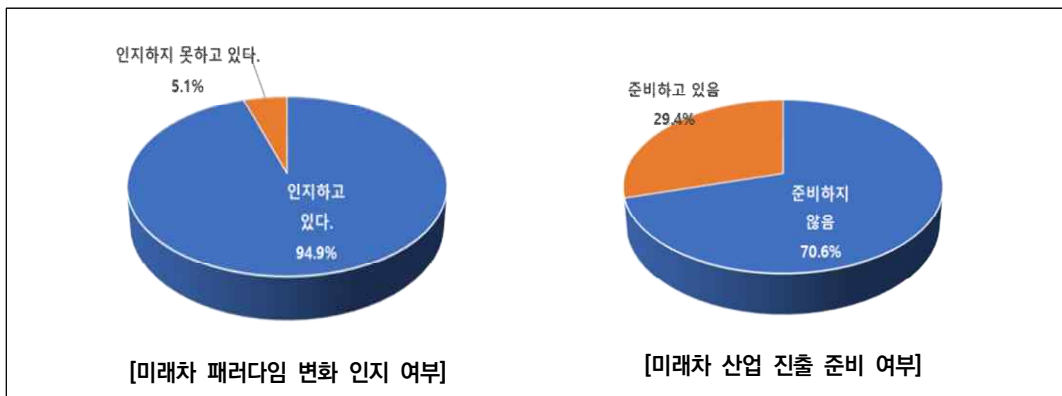
6) 인천시 6대 집중육성 전략산업에는 △미래차 △바이오 △반도체 △항공 △로봇 △디지털·데이터가 포함.

7) 관계부처 합동(2021.06)의 현황 및 문제점 내용 및 한국자동차연구원(2021.03) 참조.

- 미래차 사업 진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대비 계획이 없는 원인으로는 △자금 부족(42.5%) △정보 부족(32.2%) △기술 부족(20.4%) 순으로 응답

○ 한편 인천테크노파크(2022)에 따르면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 역시 약 절반 이상이 수요처·부품 호환성·자금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사업전환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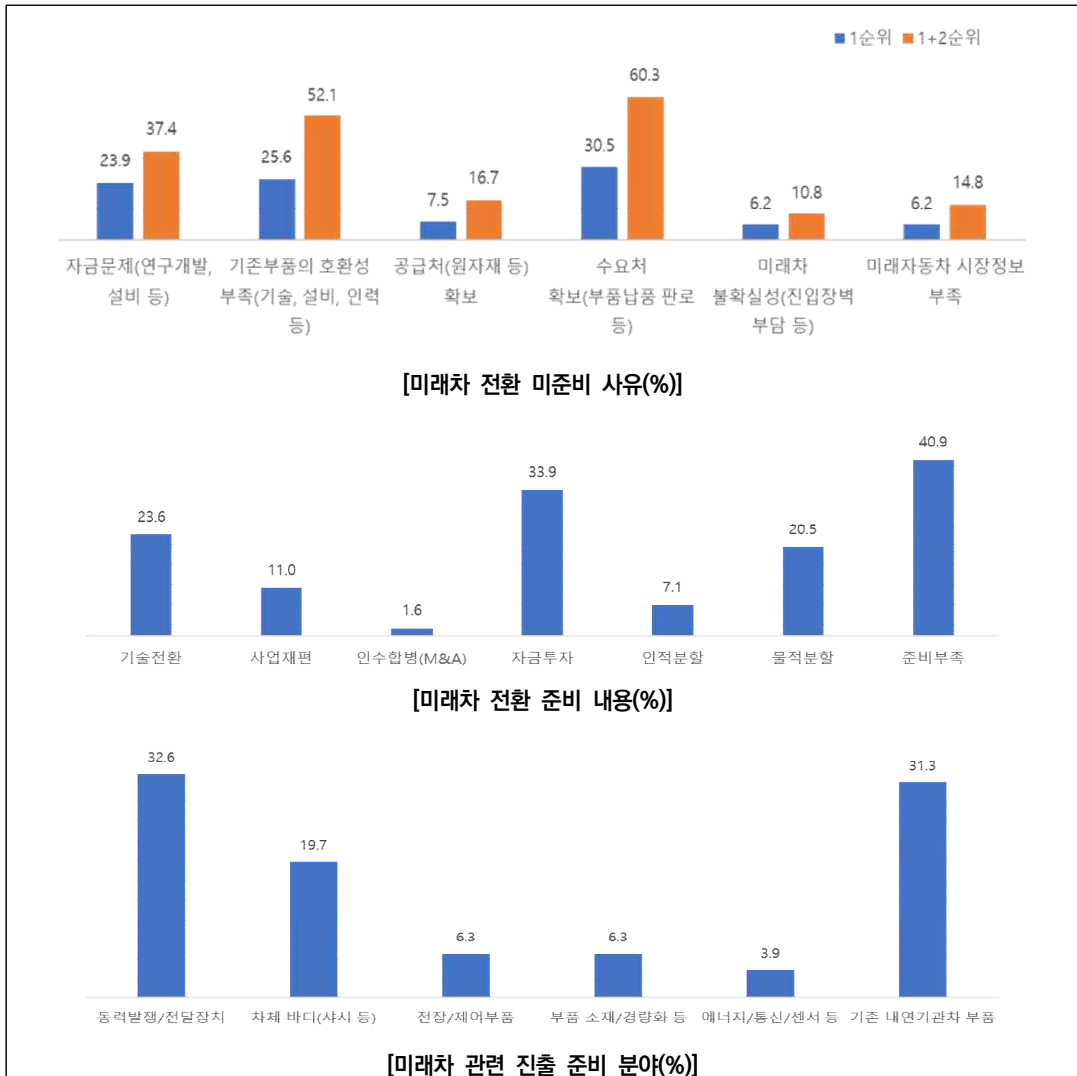
- **(인지 및 준비 여부)**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약 94.9%가 미래차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으나, 미래차 분야 진출을 준비 중인 기업은 약 29.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 **(미준비 사유)**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지 않는다는 305개 기업을 대상으로 이유에 대해 질의한 결과, △수요처 확보(60.3%) △기존 부품의 호환성 부족(52.1%) △자금 문제(37.4%) 등이 주요 원인으로 조사
- **(준비 내용)** 미래차 전환 준비 기업들은 주로 자금투자(33.9%)와 기술전환(23.6%)을 통해 산업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도 40.9%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
- 미래차 전환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이라 하더라도 사업재편, 인적분할, 물적분할 등과 같은 산업전환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응보다는 자금투자, 기술전환 등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소극적 대응 위주
- **(준비 분야)** 미래차 산업으로의 전환 시 주력으로 준비하는 부품 분야는 ‘동력발생/전달장치’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차체 바디(샤시 등) 19.7%, 전장/제어부품(ECU, 전력 등) 6.3%, 부품 소재/경량화 등 6.3% 순인 것으로 확인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2) 참고 및 재구성

[그림 1]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인지 및 준비 여부

8) 인천테크노파크(2022)에서 인천 소재 자동차 부품기업 43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작성. 동 실태조사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관련 △인지상황 △준비 상황 △준비 내용 △애로사항 △정책지원 수요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2) 참고 및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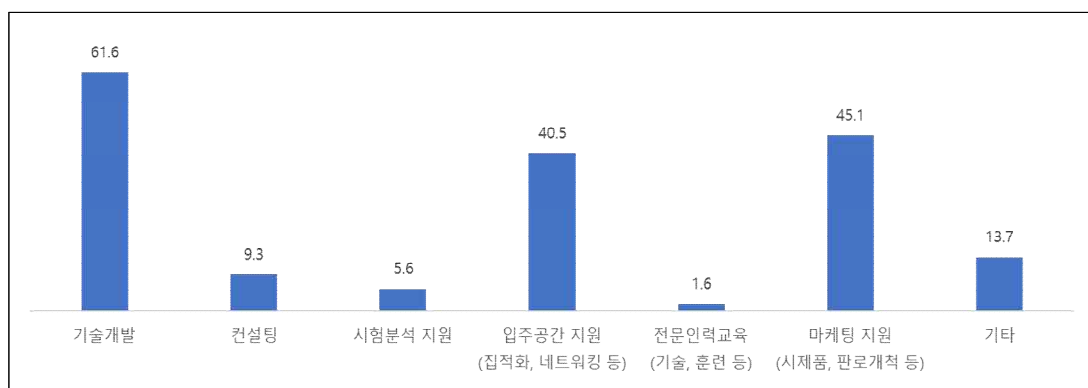
* 주 : 미래차 전환 미준비 사유는 산업전환을 준비 중이지 않다고 응답한 305개사를 대상으로 했으며, 미래차 전환 준비 내용에 대한 응답은 산업전환을 준비 중이라고 응답한 127개사를 대상, 준비 분야는 응답기업 전체를 대상

[그림 2]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준비 상황

-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패러다임에 대한 인지도가 높고 인천시도 산업전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기업들의 산업전환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기업들의 정책 수요가 높은 분야에 대한 집중지원이 필요
 - 인천시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지원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인천 미래자동차 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추진하는 등 정책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업들은 여전히 산업전환 대비를 위한 전문적 준비보다는 자금, 기술개발 등 기업 전반의 역량과 관련된 일반적 투자를 통해 대비하고 있는 상황
 - 인천테크노파크(2022)에 따르면 인천시 자동차 부품기업들이 원하는 미래차 전환지원 정책은

기술개발(61.6%), 마케팅 지원(45.1%), 입주 공간 및 네트워킹 지원(40.5%) 등의 순으로, 컨설팅(9.3%) 시험분석 지원(5.6%) 등에 대한 수요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

- 동 조사 결과를 미래차 전환 미준비 사유로 높게 나타난 수요처 확보, 기존 부품의 호환성 부족, 자금문제 등과 연관시켜보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미래차 전환 대비를 위해서는 자사 부품의 미래차 호환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수요처 확보를 위한 마케팅 지원 등이 시급
- 특히 기술개발 지원에 대한 기업들의 정책 수요가 가장 높은 만큼 미래차 전환에 대비한 자사 부품의 성능개선, 전기차에 호환 가능 부품 개발 등에 대한 기술개발 프로그램 확대가 요구⁹⁾
- 인천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부품 희망 분야 중 기존 내연기관차 관련 부품도 상당한 수준이므로, 인천 자동차 부품 산업 생태계가 미래차 전환에 맞춰 유연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전기차 부품 개발과 기존 내연기관 부품의 친환경화/성능개선 지원도 병행할 필요
- 미래차 전환에 맞춰 자동차 산업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자동차 부품기업이 전장부품, 경량화 소재 등의 신규 구매처를 발굴하고, 글로벌 자동차 부품 공급사슬에 인천 기업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인천 내 자족형 미래차 부품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
- 한편 인천 자동차산업의 미래차 전환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과 기업 지원 프로그램 발굴을 위해서는 대상 기업들의 실태, 애로사항 및 지원 수요 등에 대한 주기적인 실태조사를 수행할 필요
- 자동차 부품의 특성상 어떤 부품을 주력 제품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실태조사를 통한 제품군별 정책지원 수요 발굴이 필요
- 실태조사 수행 시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거나, 인지했음에도 준비하지 않는 기업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산업 생태계 변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산업전환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



* 자료 : 인천테크노파크(2022) 참고 및 재구성

[그림 3] 미래차 산업 진출을 위한 지원프로그램 수요(단위: %)

9) 현재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 부품기업 지원의 경우, 사업 대상이 되는 자동차 부품기업 사이에서의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기술개발 프로그램의 확대와 더불어 현행 지원책에 대한 홍보가 필요.

건설

건설10) 및 주택시장 동향



#건설수주 #건축허가 #건축착공 #건설기성 #주택허가 #미분양

- **(전국건설)** 2023년 10월 국내 건설시장은 선행지표인 건축허가 면적 및 건설수주액과 동행지표인 건축착공 면적이 꾸준히 감소하는 추세로, 향후 건설 경기 부진이 지속될 우려
 - **(수주·허가)** 전국 건설수주액 및 건축인허가 면적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건설시장 경기가 부정적
 - 10월 건설수주액은 전년동월 수주액이 적었던 기저효과로 인해 전년동월대비 26.6% 증가한 1,258.9백억 원 수준이나, 민간부문 수주가 크게 감소하여 전월대비로는 약 10.5% 감소
 - 건축인허가 물량은 전년동월대비 40.7%, 전월대비 12.5% 감소한 8,568천m² 수준으로, 2023년 3월부터 8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
 - **(착공·기성)** 건축착공 면적은 2021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양호한 흐름
 - 건축착공 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9.4% 감소, 전월대비 5.3% 증가한 6,103천m² 수준으로, 고금리, 대출규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 부정적 요인들에 의해 감소세가 지속
 - 10월 건설기성액은 전년동월대비 6.8% 증가, 전월대비 0.4% 감소한 1,458.8백억 원 수준으로, 기성액에 선행하는 건설 수주·인허가·착공 등이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년동월비 증가세가 둔화
- **(인천건설)** 2023년 10월 기준 인천지역은 건설수주액 및 건축허가·착공 면적이 모두 전년동월대비 감소하며, 전반적인 지역 건설경기가 부진
 - **(수주·허가)** 인천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과 유사한 추이를 보이며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건축허가 면적의 경우 두달 연속 전월대비 급격히 감소하며 상승세가 둔화
 - 인천 건설수주는 지난 7월 이후 소폭 증가하여 2023년 10월 전년동월대비 101.3% 증가한 50.9백억 원을 달성했으나, 1~10월 누적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27.3% 감소한 수준으로 수주 부진이 지속
 - 2023년 10월 인천의 건축허가 면적은 전월대비 64.9%, 전년동월대비 66.7% 감소한 4,086천m² 수준으로, 2023년 8월 이후 건축허가 면적 상승세가 급격하게 하락 전환
 - **(착공)** 인천의 건축착공 면적은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26.2% 감소한 118천m² 수준으로, 착공면적 감소세가 다소 강화

10) 건설산업 시장 구분 시 공공부문은 발주자가 공공기관인 경우를, 민간부문은 발주자가 민간기관 또는 민자사업이나 국내 외국기관인 경우를 의미함.

[표 1] 건설산업 수주액 및 기성액 추이

(단위 : 백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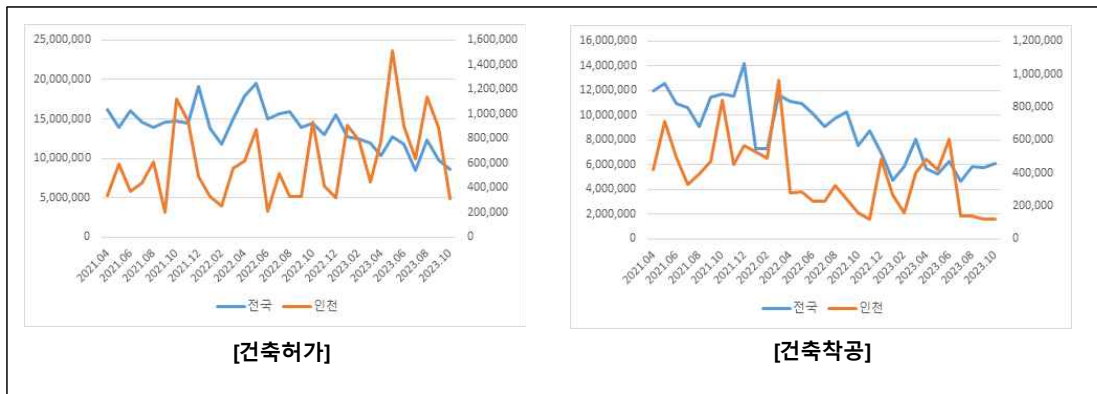
지역	구분	'23.03	'23.04	'23.05	'23.06	'23.07	'23.08	'23.09	'23.10
전국	수주액 (증감률)	1,139.0 (-41.0)	962.6 (-46.9)	1,546.0 (-18.8)	1,767.5 (-29.8)	944.0 (-48.8)	834.8 (-52.2)	1406.0 (-35.1)	1258.9 (26.6)
	기성액 (증감률)	1,515.5 (17.4)	1,456.8 (16.2)	1,442.5 (8.2)	1,642.9 (10.9)	1,369.3 (12.3)	1,416.7 (12.9)	1,464.7 (14.5)	1,458.8 (6.8)
인천	수주액 (증감률)	29.3 (-68.2)	47.0 (-24.8)	207.8 (79.0)	133.7 (12.2)	13.4 (-81.0)	32.1 (-71.6)	54.8 (-13.1)	50.9 (101.3)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설경기동향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3 : 건설수주액 및 기성액은 최근 연도에 진행된 '건설업조사'에 근거하여 각각 총기성액의 54%, 50%에 해당하는 기성액 순위 상위업체 선정하여 작성된 정보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건축허가 및 착공은 연면적(m²)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건축 인허가 및 착공 현황(2023.10)

○ **(전국주택)** 2023년 10월 기준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은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분양물량 감소 및 부동산 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미분양 주택 수 역시 감소

- **(허가)** 국내 2023년 10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58.1%, 전년동월대비 62.5% 감소한 18,047호 수준으로 감소세가 지속¹¹⁾

• 지난 9월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크게 증가하며 주택시장이 개선되는 듯 했으나, 10월 들어 공공과 민간 모두 전년동월 및 전월대비 감소

- **(미분양)**¹²⁾ 전국 미분양주택 수는 전월대비 2.5% 감소, 전년동월대비 23.5% 증가한 58,299호로, 2023년 2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

11) 주택의 경우 공급(입주)까지 인·허가 이후 3~5년, 착공 이후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량이 부족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

12) 통계청 및 주택협회에서 제공하는 미분양자료는 공공부문의 미분양 물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민간부문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공공부문의 자료가 더해지면 더욱 증가할 가능성.

-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7.5%, 전년동월대비 44.5% 증가한 10,224호로 꾸준히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는데다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

○ **(인천주택)** 인천지역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와 유사한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미분양 주택 수는 2023년 6월 이후 다소 증가

- **(허가)** 인천의 2023년 10월 주택건설 인허가는 전월대비 77.0%, 전년동월대비 83.2% 감소한 855호 수준이나, 1~10월 누계로는 전년동월비 5.7%, 전월비 5.6% 소폭 증가

- 최근 인천 주택건설 시장의 공공부문 인허가 물량이 거의 없는 상황인 가운데 민간부문의 허가 물량 역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

- **(미분양)** 2023년 10월 기준 인천의 미분양주택은 전월대비 5.3% 감소, 전년동월대비 1.6% 증가한 1,693호로, △고금리 △분양 경쟁률 하락 △주택가격 하락 조짐 등의 요인이 미분양 주택 증가에 영향

[표 3]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및 미분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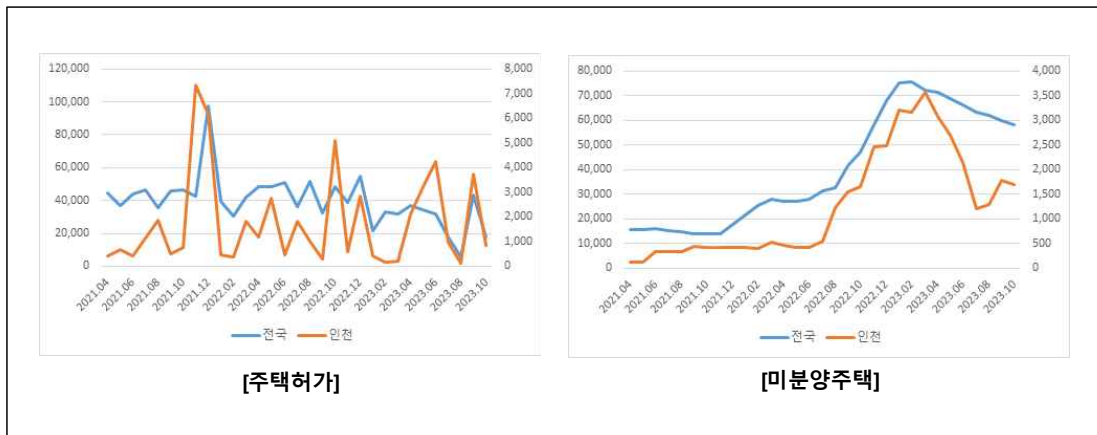
(단위 : 호, %)

항목		'23.07	'23.08	'23.09 (p)	'23.10 (p)	'22.10	전월비	전년 동월비
허가	공공	1,500	0	734	22	2,401	-97.0	-99.1
	민간	16,565	5,479	42,380	18,025	45,717	-57.5	-60.6
미분양	민간	63,087	61,811	59,806	58,299	42,217	-2.5	23.5
	(준공후)	9,041	9,392	9,513	10,224	7,077	7.5	44.5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2 : 주택허가 통계는 월별 누계액 자료에서 전월 자료를 제한 각 달의 수치를 산출하여 이용



* 자료 :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건설실적통계', '미분양주택 현황조사' 참고 및 재구성

* 주 : 주택허가 및 미분양은 호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2] 주택 건설인허가 및 미분양 현황(2023.10)

[부록] 주요 산업 경기지표(2023.10 잠정)

제조업 생산지수	전국						인천					
	생산		출하		재고		생산		출하		재고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지수	증감
반도체	123.9	7.9	108.8	1.6	179.4	33.5	176.6	8.0	189.8	9.3	134.8	-10.1
자동차	125.3	2.8	122.1	1.9	114.9	19.8	129.9	4.2	122.2	-0.6	118.8	18.8
기계장비	94.0	-13.3	95.5	-9.9	137.9	-4.6	130.1	2.3	123.7	-2.1	191.6	59.1
바이오-의약	122.6	2.2	130.3	7.8	-	-	152.4	26.7	153.5	64.5	-	-
바이오-화장품	85.0	-0.1	88.4	-2.3	102.4	-3.8	107.4	4.3	94.7	22.5	113.8	23.3
건설 수주액 (억원)	전국						인천					
	공공		민간		공공		공공		민간		민간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건설	22,355	1.3	102,938	36.2	3,709	166.0	1,385	22.0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의 산업별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항목명은 순서대로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건설수주 등

2 : 생산지수는 2020년 기준 원지수를, 건설수주액은 종합건설업체의 건설수주액 경상가격을 이용해 작성되었으며,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3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금융

무주택 청년의 주거지원을 위한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추진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청년의 내집 마련 지원을 위해 1년간 청약 통장 가입 시 2% 대의 저리대출을 생애 3단계에 걸쳐 추가 우대하는 내용의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을 추진할 계획
 - 지원의 첫 단계로 2024년 초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가입요건 △이자율 △납입한도 등을 확대 개편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상품을 출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는 신규 상품 출시 시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전환 가입되며, 일반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주택드림 청약통장 요건 충족 시 전환이 가능
 - 둘째로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1년 이상, 1,000만 원 이상 납입한 청년이 동 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일정 조건에 따라 최저 2.2%의 저금리로 분양가의 80%까지 대출을 제공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제공
 - 또한 정부는 동 지원책에 대출 이용 후에도 결혼·출산·다자녀 등 생애주기에 걸친 가정 형태 변경 시 추가 우대금리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 할 예정

산업

정부, 연구개발 환경 개선을 통해 혁신적 R&D 도전 촉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지난 11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확정한 「윤석열 정부 R&D 혁신 방안」과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을 발표
 - 정부의 'R&D 혁신 방안' 및 '글로벌 R&D 전략'에는 기존의 한계를 넘어 세계 최고에 도전하는 혁신적 R&D 육성하기 위한 △제도 △투자 △국제협력 등 3대 분야의 연구개발 환경 개선 사항이 포함

구분	윤석열 정부 R&D 혁신방안	세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R&D 추진전략
목표	• 연구자의 도전과 혁신을 견인하는 제도 혁신 • 기초·원천·차세대 기술 중심 투자 혁신	•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글로벌 R&D 시스템 혁신 • 국내 연구자의 글로벌 역량 강화 •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연구 생태계 조성
주요 추진 과제	• 혁신·도전적 연구의 예비타당성조사 적극 면제 및 성공·실패 폐지 • 연구시설·장비 조달기간 단축(210일→50일) • 연중 언제든지 우수 연구과제 선정 • '동일기관 상피제' 폐지 및 평가 결과 공개 • 국가전략기술 R&D 연 5조 원 수준 지속 투자	• 향후 3년간 글로벌 R&D 투자 5.4조 원 + α 확대 • 주요 기술 분야 글로벌 R&D 전략지도 수립 및 글로벌 R&D 플래그십 프로젝트 발굴·추진 • 한미일 공동 R&D 협력 프로젝트 신설 추진 • 해외 협력을 주도할 '글로벌 R&D 전략 거점센터' 운영 • 해외 연구자 참여, 지적권 보호 등 글로벌 R&D 제도 개선

#해양수산부

- 정부가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을 통해 2050 해양강국을 실현하기 위해 2027년까지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12% 달성 △국제해운 탄소 30% 저감 △자율운항선박 원격운항·선원미승선을 목표로 하는 「첨단 해양모빌리티 육성 전략」을 수립
- 2050년 해양강국 도약을 위한 최종 목표는 △시장점유율 32.2% △국제해운 탄소중립 △선박 완전 자율운항 등을 달성하는 것으로, 동 전략은 국가 차원에서 해양모빌리티를 육성·지원하기 위해 마련
- 동 육성 전략은 ①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②자율운항선박 시장 선도 ③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④연관산업 육성 ⑤지원체계 운영 등 5개 분야에서 총 15개 과제를 추진할 계획

추진 분야	주요 내용
친환경 해운 솔루션 제공	• 친환경 선박 전환을 위한 보조금·금융·세제 지원 및 행정규제 완화 • 저탄소·무탄소 기술 R&D 및 실증 인프라 구축 • 친환경 선박이 운항하는 녹색항로의 국내·외 구축 및 연료 공급망·인프라 확충
자율주행선박 시장 선도	• 자율항해 및 기관 자동운전 기술, 기관 고장 진단·예측 기술, 원격 지원기술 개발 • 자율운항 선박 성능 실증 운행 및 운항 지원을 위한 항만·항로표지 등 연계기술 개발
첨단 해양교통 플랫폼 구축	• 고정밀 위치정보 기술 기반 한국형 위성항법 시스템 구축 및 신규 해양교통시설 설치 • 디지털 해상교통정보 기술·서비스 개발 및 플랫폼 구축
연관 산업 육성	• 미래 연료 관련 신소재 개발·활용 • 선박평형수 처리, 선체 부착생물 관리 등 선박 운영 관련 부품·장비 기술 개발
지원체계 운영	• 신기술 설비·기자재 상용화·수출 지원 및 국내외 판로 개척 지원 • 기술개발·표준화 등을 위한 국제협력 확대 및 해양모빌리티 전문인력 양성

#보건복지부

- 정부가 초고령사회 및 신노년세대 등 다양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하여 2024년 총 103만 개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
- 2024년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65세 이상) △사회서비스형(60세 이상) △시장형(60세 이상) 등 3가지 사업단으로 구분되며, 2023년 11월 29일(수)부터 12월 29일(금)까지 '노인일자리 여기'·'복지로' 등 온라인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노인복지관 등 사업 수행기관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활동 역량 및 경력 등 사업 유형별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선발되며,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기관이 올해 12월 중순에서 2024년 1월 초 사이 개별 통보할 예정
-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에 대해서는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1544-3388)로 연락 시, 본인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수행기관으로의 전화 연결을 통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상세 안내를 제공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시·도, 15곳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지구를 지정하고, 기존 시범지구의 운영성과 평가 결과를 확정·발표
 -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는 도심에서의 자율차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안전 기준 일부 면제, 유상 여객·화물운송 특례 등이 부여되는 구역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정
 - 이번에 지정된 15개 시범운행지구 중 △인천 구월·송도·영종·국제공항 △경기 안양 △울산 △대구 동성로 △경북 경주 △경남 사천 △전남 해남 등 10곳은 신규 지정이며, 경기 판교·제주 등 5곳은 기존 시범운행지구 범위를 변경·확장 지정
 - 금번 신규 지정을 통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전국 17개 시도 34개 지역으로 확대되며,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22.09)」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전국 확대(~'25) 목표를 조기 달성
 - 한편 '22년 시범운행지구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 서울 상암이 주요 지역에 수요응답 노선형 자율주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조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으며 성과 평가 최초로 A등급을 수여
 - 서울 상암을 제외한 시범운행지구 중 광주, 서울 청계천, 제주, 경기 판교 등 4곳은 B등급, 충북·세종과 대구 2곳은 C등급을 받았으나, 이외 7개 지역은 D등급 이하의 성적을 기록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올해의 마지막 동행축제인 '눈꽃 동행축제'가 12월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진행될 예정
 - 금번 축제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행사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를 위한 할인행사와 더불어 추운 겨울 이웃과 따뜻한 온기를 나누자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
 -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개최,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 행사를 전개할 계획이며, 전국 주요 상권 11곳에서는 크리스마스·연말연시를 맞아 구매고객에 경품제공 행사를 진행
 - 또한 주요 유통경로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200여 개 경로를 통해 방한용품 및 먹거리 등을 중심으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할 계획
 - 동행축제 상품할인 및 행사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동행축제.org)과 카카오톡 '동행세일'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

#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는 소비자 부채부담 경감을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한시 면제하고, 현행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
 - 신한·하나·KB·우리·농협·IBK기업은행은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12월 31일까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등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기로 결정
 - 수수료 면제 조치에 따라 12월 중 대출자가 본인 자금으로 대출 금액을 상환하거나 동일 은행 타 상품으로 전환하는 경우 수수료를 전액 감면
 -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신용등급 30% 이하의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제공하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치는 1년 더 연장하여 2025년 초까지 운영할 계획
 -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체계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관련 △규정 개정 △비교·공시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추진하고, 은행권은 고객 및 상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 및 요율 등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 방안 발표에 따라 지난 6월부터 진행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12월 15일부터 대폭 확대될 예정
 - 금번 보완 방안은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서 허용한다는 원칙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복지부는 의료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금번 변경된 사항에 대해 기존 내용과 대비하여 집중적으로 안내할 계획

목표	구분	기 존	변 경('23.12.15~)
의료접근성 향상	대면진료 경험자 기준 간소화	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질환자 30일 이내 동일 질환에 대해 가능	질환 관계없이 6개월 이내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가능
	의료취약지역 범위 확대	일부 섬·벽지 지역만 진료이력 없이 비대면 진료 가능	응급의료 취약지 98개 시·군·구 추가
	휴일·야간 진료 허용 확대	대면진료 유경험 환자 또는 일부 의료취약계층만 가능	휴일·야간 시간대에는 진료이력 관계없이 허용
비대면진료 안전성 강화	대면진료 요구권 명확화	-	의사 판단에 따라 비대면진료 부적합 환자에 대한 대면진료 요구 가능
	의약품 관리강화	-	마약류 의약품, 약물 오·남용 우려가 큰 의약품에 대한 관리강화
	처방전 위·변조 방지	처방전을 팩스, 이메일 등으로 약국에 전송	처방전은 의료기관에서 약국으로 직접 전송하고, 원본 처방전 다운로드 불가

참고 자료

- KPMG,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2020」, 2020.07.
- Deloitte, 「자동차 가치사슬의 미래: 2023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 리스크 모니터」, 2023.08.
- IEA, 「Global EV Outlook 2023」, 2023.04.
-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연간 및 12월 자동차산업 동향(잠정)”, 2023.01.30.
- 국토교통부, “자동차 누적등록대수 2,550만대, 친환경차 150만대 돌파”, 2023.01.26.
- 국가법령정보포털,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차 산업 신속전환을 위한 3대 전략”, 2019.10.15.
-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산업 발전 전략 -2030년 국가 로드맵-」, 2019.10.
- 관계부처 합동,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 2020.10.
- 관계부처 합동, 「자동차 부품기업 미래차 전환 지원 전략」, 2021.06.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 부품산업의 신속·유연한 전환을 통해 미래차 시대 준비에 본격 나선다”, 2023.05.23.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총력대응 시작”, 2023.05.26.
-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총조사’.
- 인천광역시, “인천시, ‘미래차 기술혁신 선도도시 인천’ 비전 제시”, 2023.01.09.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미래자동차산업 육성 종합계획」, 2021.
- 인천광역시, 「인천 전략산업육성 종합계획(안)」, 2023.05.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HIF 월간 산업 이슈(08월)」, 2021.08.18.
- 미래차 전환 종합정보시스템, www.transform-katech.re.kr.
- 한국자동차연구원, 「2020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1.03.
- 한국자동차연구원, 「2021년 자동차 부품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2022.03.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미래차 부품 기술 로드맵 연구용역」, 2022.11.30.
-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미래자동차 부품기업 기술전환 실태조사」, 2022.
- 국가통계포털(KOSIS), ‘건축허가 및 착공통계’ 및 ‘주택건설실적통계’.
- 한국주택협회,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및 ‘건설경기동향조사’.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내년 출시…주담대 연 2.2% 적용”, 국토교통부, 2023.11.24.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혁신적 R&D에 마음껏 도전할’…성공 실패 구분 짓는 평가등급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11.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7년까지 해양모빌리티 시장점유율 1%→12%로…해양강국 실현”, 해양수산부, 2023.11.27.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내년 노인일자리 14만 7000개 ‘다’ 확대…총 103만 개 제공”, 보건복지부, 2023.11.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인천·울산 등 자율주행 시범지구 신규 선정…전국 모든 시도 확대”, 국토교통부, 2023.11.2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눈꽃 동행축제’ 다음달 4일 개막…중기제품 최대 50% 할인”, 중소벤처기업부, 2023.11.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취약차주 면제도 연장”, 금융위원회, 2023.11.2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15일부터 비대면진료 확대…야간·휴일에는 초진 전면 허용”, 보건복지부, 2023.12.01.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7호(2023.12.08)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12월 08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